

칼럼 Column

21세기 지식정보기반사회를 선도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출범



한 상 완 대통령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 swhan@yonsei.ac.kr

우리 도서관계는 근 50여년간이나 도서관발전과 이를 견인할 강력한 중앙 정부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그 기구가 도서관청이나 관계 부처 국단위 수준이 아니면 대통령 직속으로 위원회를 두어 후진적 도서관계를 정상화하고 미래지향적 문화복지국가의 전진기지로 거듭나야 할 것임을 염원하였다.

도서관계는 수십 년 동안 대 정부 정책건의, 대안 제시, 도서관법에의 반영, 토론과 학술 발표 등의 노력을 경주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하던 우리의 숙원사업은, 1987년 11월에 개정·공포된 「도서관법」과 1988년 개정된 동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데 성공함으로써 비로소 도서관발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까지는 성공하였다.

이 위원회가 문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도서관발전 기본방안, 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도서관기금 조성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어 2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으나, 그 기능이 문교부 장관의 자문기관에 머물렀던 태생적 제한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바톤을 문화부에 넘기게 되었다. 1991년에 도서관정책 소관 부서가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됨으로써 도서관발전위원회도 문화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옮겨

겨가게 되었다.

문화부는 위원회를 재구성하여 1992년 7월에 첫 위원회를 열었다. 문화부 차관을 위원장, 국립중앙도서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는 당연직위원 10명, 위촉직위원 18명 등 30명으로 구성하고, 3개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즉 도서관발전기본정책분과위원회(11명), 도서관개정분과위원회(9명), 도서관협력망분과위원회(8명)가 그것이었다.

그 후 1994년 3월에 「도서관진흥법」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으로 개정되자 도서관발전위원회도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고, 그 첫 회의가 동년 12월에야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위원회의 운영규칙 제정, 도서관 및 독서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도서관 진흥기금을 위한 정부출연금 확보 등에 관한 정책제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그 다음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위원회가 열린 것은 1996년 12월이었는데, 이를 마지막으로 위원회는 2000년 1월 정부의 위원회 정비정책에 의해 퇴출당하는 비운을 겪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한국도서관협회와 문화정책개발원의 노력 즉, 두 차례의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문화관광부는 훈령으로 국가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이 위원회를 다시 소생시켰다.



이 위원회는 성격상 많은 제한점을 갖고 있었고, 그 기능과 역할도 이전의 것과 대동소이하였다. 특이한 점은 정부부처의 관계자가 포함되지 않고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의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다. 이 자문회의는 2002년도에 1차, 2003년도에 2차 회의를 여는데 그쳤다.

이렇게 다소 장황하게 위원회의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살펴본 이유는 간단하다. 사분오열된 도서관 행정의 난맥상으로 인하여 일관된 정책시행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1개 중앙정부부서에 속한 자문 성격의 위원회로는 그 실효를 거둘 수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짚을 필요성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한적 성격의 위원회를 운영해본 경험을 토대로 그 전철을 답습하지 않을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탄생시켰다.

2006년 9월 국회는 종전의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전면개정한 「도서관법」(법률 제8029호, 2007.4.5. 시행)을 통과시킴으로써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발족시키는 역사적 전기를 마련했다. 이 위원회는 13개 관계 중앙정부부처의 장과 민간인 전문가등 3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법률은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위원회는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다. 6월 19일에는 권양숙 대통령영부인과 관계 주요 정치인, 관계 중앙 부처의 장, 주요 국가도서관 관장, 그리고 도서관계, 학계 주요인사들이 참석하여 역사적인 위원회와 도서관정보정책기획

단의 현판식과 발족식을 가졌다.

새로운 도서관문화의 꽃을 피울 이 위원회는, 선진 미국과 영국의 제도와 성격에 견주어 보아도 결코 손색이 없는 법적,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새로운 도서관 행정기구인 IMLS(Institute for Museum and Library Service)가 연방정부의 도서관 지원금을 배분하며, 도서관 육성업무, 그리고 행정적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에 비해 NCLIS(National Commission on Libraries and Information Science)는 정책연구 등을 통하여 지난 37년간 미국의 도서관 발전과 정보서비스의 향상에 지대한 공헌을 한 정책 자문기구라 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다. 우리가 출범시킨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Presidential Committe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Policy)는, 그 효율적 운영과 정책집행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소속의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을 두어 미국의 IMLS와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의 IMLS의 기능과 NCLIS의 기능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영국의 박물관·기록관·도서관위원회(Council for Museums, Archives and Libraries: Resource)와 유사한 형태의 위원회이다.

Resource는 영국의 도서관을 비롯한 박물관과 기록관에 관한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정부에 권고와 자문을 하며, 각 부분(박물관, 기록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의 프로젝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 등을 관장한다. 또한 다양한 도서관과 정보시스템을 조정하고, 국가차원의 이 분야 발전을 위한 연구전략수립과 개발, 그리고 평가를 하고 세계적 시야에서 도서관, 정보분야의 문제를 조정하는 등의 국제활동도 수행한다. 또한 이 기구는 영국국가도서관(The British Library)에서 갖고 있던 정책연구 기능을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도 유념해 봐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나라의 도



서관 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하는 기능을 갖는다. 즉 「도서관법」 제12조에 규정된 도서관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도서관관련제도,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 도서관 운영평가,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 그리고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서관법」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으로 하여금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이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의무화되어 있는 등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도 정부 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의 장관과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등 당연직 위원13명과,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위원회 구성은 도서관계가 정부수립 이후 줄곧 염원하던 일이었는데,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미래지향적이고도 획기적인 정책 결단에 의하여 그 꿈을 이뤄내게 된 것이며, 이에 우리 도서관계를 대표하여 대통령께 깊은 경의와 감사

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를 위해 꿈꾸고 정책 대안을 내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려온 도서관계 동지들의 하나된 노력과 정성에 대하여, 그리고 도서관이 이 나라의 문화복지 향상과 학문발전을 위한 가장 소중한 전진기지를 이해하고 후원해준 정계와 문화계의 동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기획단을 함께 출범시켰다. 이 역사적인 일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이 나라의 도서관문화를 가꾸고 견인하며 융성발전시켜, 모든 국민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그 소임을 다하여야 할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시발점이기도 하다. 우리 위원회와 기획단은 맡겨진 임무와 기능을 혼신의 힘을 기울여 차근차근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우리 도서관계의 전문가 여러분 동지들과 관계 정부부처, 그리고 16개 시·도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과 일관된 도서관정보의 발전정책을 창출하고 시행하여 도서관문화 선진국, 나아가 진정한 문화 선진국, 문화복지국가로 도약하는 국민적 소망을 함께 이루어 낼 것을 다짐한다.

지금까지 묵묵히 도서관계 현장에서 어렵고 어두웠던 도서관문화의 현장을 지키며 헌신했던 전국의 도서관인도 이제 과거에 시야를 매어두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제 도서관문화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서 있으므로, 너무 조급하거나 환상에 기대지는 않으면서 힘찬 발걸음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와 함께 도서관문화의 창달을 위한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